

#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협력 확대와 시사점

이한나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leehn@kiep.go.kr, Tel: 044-414-1288)



## 차 례

1. 추진 배경
2.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의 영향 및 한계
3.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중국은 2026년 5월 1일부터 수교 중인 아프리카 53개국의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는 2024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협력 확대 기조의 후속 조치이자 2025년 창사 선언(长沙宣言)에 명시된 조치임.
  - 이번 조치는 미국의 고관세 기조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한시 연장에 따른 불확실성과 대비되며, 중국 시장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 구축, FOCAC를 통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이어 무관세 조치까지 시행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통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외교 패키지는 PGII·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추진 중인 미국·EU와 비교해 FOCAC·일대일로·무관세를 결합한 제도적 연계성과 단기 실행력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무관세 조치에 따른 직접적 가격 효과는 농산물·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중 약 90%를 차지하는 광물·원유 등은 기존 관세율이 이미 낮아 전체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 ▶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외교는 무관세 조치를 계기로 한층 심화되고 있으나,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결국 이번 조치는 경제적 성과보다 글로벌 사우스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는 조치로 평가됨.
  - 무관세 조치가 인프라·금융·투자와 결합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경로를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도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을 재검토하여 차별화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이행을 통해 대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 추진 배경

- 중국은 2026년 5월 1일부터 수교 중인 아프리카 53개국의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출범 이후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심화되어 온 중-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제도적 완성으로 평가됨.<sup>1)</sup>
  - FOCAC 출범 이후 중-아프리카 교역 총액은 2025년 3,4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은 17년 연속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sup>2)</sup>
    - 다만 중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은 수출(2,250억 달러)이 수입(1,230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 무역적자(1,020억 달러)가 확대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이번 무관세 조치는 2024년 9월 FOCAC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기조의 후속 이행 조치로, 2025년 6월 창사(长沙)에서 채택된 ‘창사 선언(长沙宣言)’ 제8항에 근거함.<sup>3)</sup>
    - 창사 선언 제8항(일부 내용): 중국은 ‘공동발전경제파트너십협정’ 협상·체결을 통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스와티니 제외)의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조치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전체 수교국으로 전면 확장됨.
  - 중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 33개국에 대해 전 품목 무관세를 먼저 시행하였으며, 시행 이후 2025년 3월까지 33개국의 대중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214억 2,000만 달러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음.<sup>4)</sup>
  - 2026년 5월 1일부터는 남아공·케냐·나이지리아·이집트·모로코 등 비LDC 주요국을 포함한 53개 수교국 전체로 확대되며, 카카오·설탕·수산물 등 기존 최대 25% 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이 무관세로 전환됨. 다만 대만과 수교 중인 에스와티니는 유일하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sup>5)</sup>

표 1.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확대 경과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주요 대상국(예시)	근거
2024. 12.	아프리카 LDC 33개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말리, 모잠비크 등	FOCAC 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
2026. 5.	수교국 53개국 전체 (LDC 포함)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등 비LDC 추가 *적용 예외: 에스와티니(대만 수교국)	창사 선언 제8항 (2025. 6. 11.)

자료: 저자 작성.

1) FOCAC는 중국과 아프리카 53개국 및 아프리카 연합(AU)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로서 중국-아프리카 간 상호 우호 협력 및 공동발전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어왔음.  
 2) CEIC Database(검색일: 2025. 4. 21.).  
 3) 外交部(2024), 「中非合作论坛—北京行动计划(2025-2027)」; 外交部(2025), 「中非维护全球南方团结合作的长沙宣言」.  
 4) 第一财经(2025. 6. 12.), 「从33国到53国全覆盖, “100%税目产品零关税”助力非洲优质商品入华」.  
 5) 外交部(2026. 2. 14.), 「习近平向第39届非洲联盟峰会致贺电」.

- 이번 무관세 조치 시행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영향력 약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와 맞물려 그 전략적 의미가 더욱 부각됨.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조정 후에도 10~3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전면 무관세 조치는 미국의 고관세 기조와 차별화되는 대아프리카 통상 접근으로 부각되고 있음.<sup>6)</sup>
- 또한 미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특혜 제도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이 2025년 9월 만료 후 2026년 12월까지 단기 연장에 그친 반면, 중국의 전면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보다 안정적인 중국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있음.<sup>7)</sup>

## 2.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의 영향 및 한계

### 가. 경제협력을 통한 영향력 확대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 구축, FOCAC를 통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이어 무관세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기반으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중국은 FOCAC 출범 이후 아프리카 53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战略伙伴关系)’를 구축하고,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해왔음.<sup>8)</sup>
  - 또한 2024년 FOCAC 베이징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51개국 정상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같은 달 개최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국가 수를 상회하는 수치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 플랫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줌.<sup>9)</sup>
- 중국이 추진해온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시장 접근성 확대는 점차 축적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편입되는 경향을 강화함.
  - [인프라] 일대일로를 통해 아프리카 광산과 항구를 잇는 철도·도로·항만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중 수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선점함.<sup>10)</sup>
  - [금융] FOCAC 금융 지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적 대중 의존 구조를 심화시킴. ‘중·아프리카발전기금(中非发展基金)’은 2023년 10월 기준 아프리카 39개국에 누적 7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로써 중국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용자 규모는 310억 달러를 상회함.<sup>11)</sup>

6)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25. 6.), “How African Countries Are Responding to the New U.S. Reciprocal Tariffs”; Global Governance Project(2025. 11. 16.), “African trade policies in Mr Trump’s world.”

7) USTR(2026. 2. 3.), “Statement from Ambassador Jamieson Greer on the Reauthorization of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8) 外交部(2025. 6. 11.), 「中非合作论坛成立25周年暨第四届中国—非洲经贸博览会招待会在长沙举行」.

9) Chatham House(2024. 9. 16.), “China-Africa summit: Why the continent has more options than ever.”

10) 光明日报(2024. 9. 16.), 「中非经贸合作助力非洲推进现代化」.

11) 国际商报(2024. 12. 30.), 「中非共建“一带一路”取得全方位发展成果」.

- [시정] 이번 무관세 조치는 중국 시장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인프라·금융 지원을 통해 형성된 대중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기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번 무관세 조치는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인 글로벌 사우스 연대와 다극 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왕이 외교부장은 창사(长沙)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무관세 조치가 “새로운 시대 중·아프리카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것임을 공식 천명함.<sup>12)</sup>
- 시진핑 주석도 동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중국의 거대시장은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파트너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힘.<sup>13)</sup>

■ 중국은 아프리카의 외교적 지지를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영향력 확대에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이 외교적 연대로 전환되는 구조가 점차 공고해지고 있음.

- UN 193개 회원국 중 아프리카 54개국은 약 28%를 차지하며, 중국과 수교한 53개국의 외교적 지지는 결의안 표결·국제기구 수장 선출 등 중국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
  - 중국과 아프리카 간 체결된 양자협정에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과 ‘글로벌 거버넌스 현안 상호지지’가 포함되어 경제협력이 외교적 지지로 전환되는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음.<sup>14)</sup>
  - 일례로 신장 위구르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국제무대 논의에서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우호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점은 경제협력이 외교적 지지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중국은 아프리카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 등 자국이 제안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방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적 규범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음.
  - GDI·GSI·GCI는 2024년 FOCAC 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에 공식 반영되었으며, 아프리카 53개국이 이에 지지를 표명함.<sup>15)</sup>
  - 중국은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내정 불간섭,’ ‘조건 없는 지원,’ ‘상호 존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건부 원조를 제공하는 서방 모델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음.

## 나. 무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와 구조적 한계

-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FOCAC·일대일로·금융 지원과 결합된 경제외교 패키지의 일부로서, 미국·EU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과 비교해 실행 속도와 제도적 연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미국과 EU는 각각 PGII(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글로벌 게이트웨이

12) 外交部(2025. 6. 11.), 「团结一致, 携手前行, 共筑新时代全天候中非命运共同体」.

13) 外交部(2025. 6. 11.), 「习近平同刚果(布)总统萨苏分别向中非合作论坛成果落实协调人部长级会议致贺信」.

14) Africa Center for Strategic Studies(2024. 1. 24.), “Africa’s Role in China’s Multilateralism Strategy.”

15) 外交部(2024), 「中非合作论坛—北京行动计划(2025-2027年)」.

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중국은 FOCAC·일대일로·무관세를 결합한 패키지로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G7은 2027년까지 개도국 전체를 대상으로 6,000억 달러(민간 자본 포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고 공약 하였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PGII의 지속적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임.<sup>16)</sup>
  - EU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총 3,000억 유로 규모 중 1,500억 유로를 아프리카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신규 자금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을 재분류하는 방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EU 회원국 간 이견 등 의사 결정 구조의 복잡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sup>17)</sup>
-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2024년 9월 베이징 정상회의 이후 2025년 3월까지 중국의 대아프리카 신규 투자는 133억 8,000만 위안, 각종 자금 지원은 1,303억 2,000만 위안에 달하는 등 공약 이행의 가시성과 단기 실행력 측면에서 서방과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임.<sup>18)</sup>

표 2. 중국·미국·EU의 대아프리카 협력 비교

구분	중국	미국	EU
무역 특혜	전면 무관세 (53개국, 2026. 5. 1.~)	AGOA 만료 후 2026년 12월까지 한시 연장(2025. 9.~)	EPA(일부 국가)
플랫폼	FOCAC(2000년~), 일대일로(2013년~)	PGII(2022년~)	글로벌 게이트웨이(2021년~)
공약 규모	2024년 FOCAC 507억 달러(3년간)	아프리카 대상 별도 공약 없음. *개도국 대상 6,000억 달러 (2027년까지)	아프리카 대상 1,500억 유로 (2027년까지)
아프리카 대상	아프리카 53개국	로비토 회랑 등 전략 프로젝트 중심	
협력조건	내정 불간섭·무조건 지원	민주주의·인권·투명성 조건부	법치·인권·지속가능성 조건부
한계	부채 누적·무역 불균형	지속성 불투명	집행 속도 부진, 의사결정 구조 복잡

주: AGOA(아프리카성장기회법)는 2025년 9월 만료 후 2026년 12월까지 한시 연장; EPA(경제파트너십협정)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만 적용.

자료: 저자 작성.

■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LDC 대상으로 시행(2024. 12.)된 이후 농산물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교역 확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5월 1일 비LDC 중소득국으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아프리카 수교국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적 개방 단계로 전환됨.

- LDC 무관세 시행(2024. 12.) 이후 농산물을 중심으로 초기 성과가 통계로 확인되나, 아프리카의 원자재·광물 중심 수출 구조로 인해 무관세 조치의 파급효과는 품목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남.
  - 무관세 시행 이후 2025년 1분기 기준 아프리카산 커피의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0.4% 급증하였으며, 카카오 수출은 56.8% 증가하는 등 농산물 부문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sup>19)</sup>

16) Gate Center(2025. 8. 28.), "New initiatives by the US and the EU in Africa to counter Chinese presence."

17) ECDPM(2024), "Global Gateway: Where now and where to next?"

18) 外交部(2025. 6. 11.),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成果落实清单」.

- 다만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중 광물 연료·광석·구리·귀금속·코발트·유지류 6개 품목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2024년 기준), 비중이 높은 광물·금속·원유 등의 기존 관세율은 이미 0~1%로 낮아 무관세 전환의 직접적 효과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임.<sup>20)</sup>
- 2026년 5월 1일부터 비LDC 중소득국으로 무관세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조치가 선별적 우대에서 전면적 개방으로 전환됨.
  - 이번 조치는 남아공·케냐·나이지리아·이집트·모로코 등 중소득 20개국의 가공식품·와인·섬유·전자부품·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 수출품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LDC가 중심이 되던 무관세 수혜 범위가 중소득국의 다양한 수출 품목으로 확장됨.<sup>21)</sup>
  - 특히 모로코·이집트는 자동차부품 등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역량을 갖추고 있어 무관세 전환의 실질 수혜가 기대되며, 남아공은 와인·감귤류·자동차부품, 케냐는 화훼·아보카도·차(茶) 등이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됨.<sup>22)</sup>
- 중국은 이와 함께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빠른 통관 제도(그린 채널)를 확대 도입하고, 개별 국가와 '공동발전경제파트너십협정'에 서명하는 등 관세 철폐와 제도적 개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sup>23)</sup>
- 다만 중국-아프리카 간 교역 구조는 아프리카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반면 중국의 아프리카 의존도는 낮은 일방적 의존 구조를 보이고 있어, 무관세 조치의 실질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 2025년 기준 중국-아프리카 교역 총액은 3,4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중국 전체 교역액의 5% 내외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17년 연속 유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 전체의 대중 무역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 내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함.

표 3. 무관세 전환의 주요 수혜 품목

(단위: %)

품목(HS 코드)	기존 MFN 세율	일반 세율	대중 수출 비중
유지류(깨, 해바라기, 콩): HS12	3~15%	70~180%	2.07%
담배: HS24	10%	70%	0.78%
커피(생두): HS 090111	8%	50%	0.14%
볶은 커피: HS 090121	15%	80%	
카카오: HS 18	8%	30%	0.07%
석탄(LDC): HS 2701	3~6%	20%	0.55

자료: China-Global South Project(2026. 4. 6.).

19) 人民日报(2025. 12. 3.), 「零关税, 让更多非洲产品丰富中国市场(经济聚焦)」; 新华网(2026. 1. 17.), 「2025年进出口总值创历史新高, 连续9年实现增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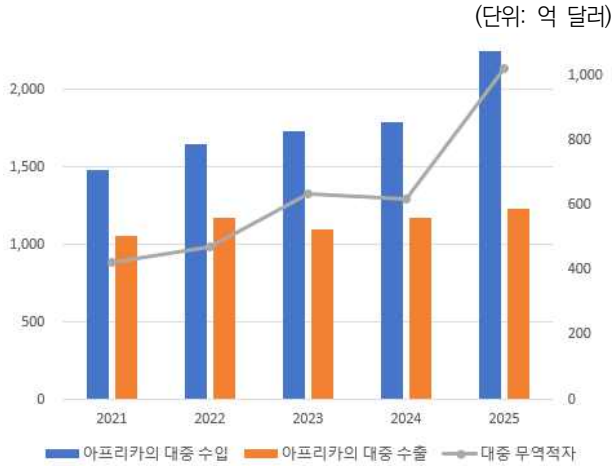
20) China-Global South Project(2026. 4. 6.), "China's Zero-Tariff Promise to Africa Masks a Deepening Trade Imbalance."

21) South Africa Trade Desk(2026. 3. 18.), "China-Africa Zero-Tariff: Opportunity or Dependency?"

22) Al Habtoor Research Centre(2026. 3.), "China's Tariff-Exemption Policy for Africa: Drivers and Outco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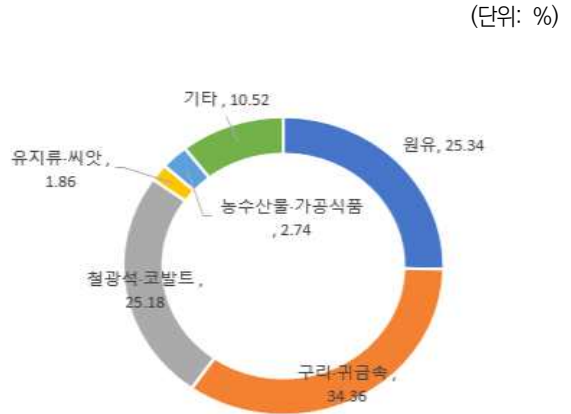
23) 外交部(2025. 6. 11.),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成果落实清单」.

그림 1.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입 및 무역적자 추이(2021~25년)



주: 대중 수출입(좌), 대중 무역적자(우).  
자료: CEIC China Premium Database(검색일: 2025. 4. 21.).

그림 2.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구조(2024년)



자료: GTAIC(2025), "China imports from Africa (January 2017 - December 2024), specifically top-300 largest value imported goods."

### 3.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은 무관세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임. 결국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사우스 내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됨.

-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중 약 90%는 이미 무관세이거나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직접적 가격 효과는 농산물·가공식품 등 나머지 품목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sup>24)</sup>
-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무관세 시장 접근이 결합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이번 조치를 서방의 보호주의와 대비되는 '중국식 개방 모델'로 제시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경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sup>25)</sup>
  - 이번 조치는 중국을 "글로벌 사우스와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이어갈 핵심 파트너"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지정학적 전략의 전환점으로 규정함.<sup>26)</sup>
- 그러나 외부 분석기관(ODI Global)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관세 수입 감소액을 연간 약 14억 달러로 추산하면서도, 물류·인증·식품안전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아프리카의 수출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함.<sup>27)</sup>

24) China-Global South Project(2026. 4. 6.), "China's Zero-Tariff Promise to Africa Masks a Deepening Trade Imbalance."

25) 外交部(2025), 「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成果落实清单」.

26) 中国日报网(2025. 12. 27.), 「年终报道 | 非洲在变局中发出更响亮声音」.

- 또한 무관세 조치가 인프라·금융·투자과 결합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경로를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기존 중국 기업 중심의 채굴·가공·운송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의 대중 공급망 편입 유인이 강화될 수 있음.<sup>28)</sup>
    - 실제 중국기업들은 잠비아·DRC·짐바브웨 등 핵심광물 생산국에서 탐사·채굴·운송 인프라를 아우르는 수직 통합 공급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음.<sup>29)</sup>
  - 이러한 구조에서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 광물의 대중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외교가 무관세 조치를 계기로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도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중국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차별화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의 수출 다변화를 제약하는 인증·검역·위생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으며, 한국은 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국과 차별화된 협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중국이 FOCAC를 통해 경제협력을 외교적 연대로 전환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도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고, 대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EP**

27) ODI Global(2025. 7. 1.), "China courts Africa with tariff-free access: a new era of trade, or just the first step?"

28) China-Global South Project(2026. 4. 6.), "China's Zero-Tariff Promise to Africa Masks a Deepening Trade Imbalance."

29) S&P Global(2025. 9. 30.), "China drives Africa's battery metals buildout."